

총선 5개월 앞인데... 선거구 획정 안돼

선거제 개혁안 27일 본회의 표결... 여야 진전 없는 평행선 호남권 7석 감소 예상... 출마 예정자들 불확실성 좌불안석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하지 못해 광주·전남 정치권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선거 50여 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던 과거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27일께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일단, 이달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안을 살펴보면 하한선이 무너지는 지역구는 ▲광주 동남을 ▲광주 서구를 ▲전남 여수갑 ▲전남 여수를 ▲전북 익산갑 ▲전북 남원·임실·순창 ▲전북 김제·부안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수는 광주가 8석에서 6석으로, 전남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든다. 전북도 10석에서 7석으로 감소하게 된다. 호남에서 국회의원 의석 7석이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혁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법 개혁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당히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최대 4석의 선거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통상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 선거구를 확정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실제,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겨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한 지역 출마 예정자는 "과거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준비를 다하고

도 선거일 50여 일 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신이 유리한 지역이 선거구에서 제외돼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에 따른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유권자와 출마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달 14~30일 7개 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를 방문해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이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향후 작업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정책전쟁 신호탄

모병제·자사고 일방고 일괄 전환 등 대형 이슈 선점

여권이 내년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교육, 부동산, 병무 등 파급력이 큰 '초대형 정책 이슈'를 꺼내 들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방고 일괄 전환,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대형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구상을 바탕으로 모병제 전환 공약을 검토 중이다.

모두 찬반이 갈리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그간 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 쉽사리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어젠다들이다.

여권이 이처럼 인화력이 강한 정책 이슈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은 시기적 우연성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전쟁'을 벌이겠다는 여권의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념 싸움과 정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 민심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대형 정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추이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교육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태세다. 모병제의 경우, 인구절벽과 현대전·과학전에 대비한 첨단 정예강군 구성을 위해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파급력이 큰 정책들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잘 된다면 총선 효과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평화 구축·미래 먹거리 선도·공정 한국 향해 전진"

집권 후반기 '3실장' 간담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인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쉽지 않았지만 이같이 밝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규정짓고 "이제 나라를 고 탄식했던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뚝뚝뚝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전선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9월 유엔총회 연설 등으로 우리의 평화·안보 구상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면

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불용, 상호안전 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밝혔다"며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면서 뚝뚝 뚝뚝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 대입 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접촉면 넓혀가는 한국당·변혁

대화 창구 개설 공감대... 원유철-정병국 물밑 대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통합을 위한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대화 창구 개설'에 공감한 데 이어 한국당 원유철·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통합 논의 과정에서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 보수 인사들의 가교 역할도 주목된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옛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몸담은 바 있고,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원 지사를 만나 보수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물밑 대화를 발판으로 한국당과 변혁은 머지않은 시점에 통합 대화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변혁 측이 통합과 관련한 내부 논의에 진전을 보이면 통합추진단을 떠올 방침이다.

다만 변혁은 안철수계 등을 아우르며 통합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 만큼 한국당에 비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변혁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권은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혁이 보수통합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용빈 민주 광산감 지역위원장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이 1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자신의 책 '이용빈이 반갑다' 출판기념회를 했다.

기념회에는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정치인, 지지자 등 3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표창원·설훈·박홍근·최재성 국회의원, 양향자 인사

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등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은 축하사에서 "이용빈 위원장의 삶 자체가 드라마다. '마을주치의'로서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의사, 그리고 우리 사회, 정치, 민족의 주치의로서의 여정을 열어간 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태양광발전소 **선** **각** **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